

광주시 '5+2 광역경제권' 보이콧 왜?

지역 성장동력 사업 대부분 빠져

광주시가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호남권 선도 사업 계획서 제출을 보류한 것은 이 사업이 영·호남 산업격차를 가중시키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주요 사업이 누락되는 등 당초투부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은 2개 권역·호남은 단일권역 '불공평'
사업 예산도 영남 수천억대, 호남은 수백억
전남도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포기 검토

◇배경=광주시는 근본적으로 '5+2 경제권 사업'에서 호남권이 단일권역으로 지정된 데 반해 영남권은 2개 권역으로 나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돼 영·호남간 산업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르는 정책으로 판단,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했다. 실제 호남권에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2개 산업이 선정된 반면, 대경권과 동남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남권에는 4개가 포함돼 있다. 더구나 선도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로 예산규모가 400억대에 불과하지만, 영남권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로 배정돼 있다.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호남권에는 신규 SOC개발은 단 건도 포함되지 않고 호남고속철, 외곽순환도로 등 대부분 기존 사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호 이질적인 문화·생활권을 갖고 있는 전북을 따로 떼어내 1개 권역으로 설정해 호남권을 광주·전남과 전북 등 2개 권역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 선도사업에 전남도의 핵심사업인 J 프로젝트, 광주시의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등 시·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현안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장='5+2광역경제권'은 사업의

성격상 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함에 따라 전남도, 전북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남도도 사실상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을 포기할 것을 검토함에 따라 사업 초기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시·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5+2 경제권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광주·전남 정치권과 보복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사업 재검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초기부터 광역경제권 사업이 삐걱거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우선 호남 광역경제권 구성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북도가 참여하는 '호남권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가 '5+2광역 경제권 사업'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산단 용지 고갈 ... 투자자 발길 돌려

김성곤 의원 "새 산단 필요"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산업단지의 추가 공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은 9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의 산업용지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계획은 광주·전남공동 국가산단(4.89km, 2009~2016년) 계획 외에는 뚜렷한 게 서있지 않다"며 "더욱이 최근 기업유치가 활발한 전남도에는 향후 5년간 임대산업단지 공급대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지역에 조성된 7만35km의 산단 중 99.1%인 6만1천537km가 분양되는 등 토지공사가 조성·분양하는 산업용

지 중 호남지역의 산업용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돼 올 상반기 목표 대비 분양률이 낮게는 100%에서 많게는 783%에 이를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이고 산업용지로서 인기가 많다"면서 "그러나 신규로 용지를 매입하거나 조성하는 실적을 광주첨단2지역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산업용지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호남지역의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수의 경우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이지만 지금은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외지의 투자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작년 초부터 화화, 조선기자재, 반도체 등의 68개 업체가 여수지역에 입주할 문이 열렸지만 산업용지가 없어 되돌아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단 여수만이 아니라 호남지역에는 군장군산, 목포대불, 전주첨단 등의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최근 투자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데에도 적절한 산업용지가 부족, 투자자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8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일시: 2008. 10. 12(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문의: 061-224-1461, 061-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회장: 임재근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가 9일 본격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기본계획안 보완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각종 지원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현대 계동빌딩에서 열린 '2012 여수엑스포 마스터플랜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장 외부에 전시된 조감도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 차원 지원 더욱 탄력 받을 듯

■ 여수박람회 특위 구성 활동 본격화 기본계획안에 지역민 여론 반영 기대도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가 강봉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에 따라 정부 차원의 여수 엑스포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특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막강 특위=이번에 구성된 국회 특위는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강봉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의 인적 인프라가 풍부, 예산 확보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주승용, 서갑원, 우윤근, 이윤석 의원 등이 포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또, 전북의 이무영 의원과 강성종 의원 등도 측면 지원에 나

선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지난 국회에서 여수엑스포유치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정의화 의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부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종구(보성), 김소남(보성), 안형환(목포), 이정현(곡성) 의원 등 전남출신 의원들이 포진, 고향의 최대 현안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태세다. ◇최대 현안=현재 여수엑스포의 최대 현안은 내달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기본계획안이다. 지난달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의 용역을 마치고 가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오현섭 여수시장은 해저수족관 'BIG O'의 사후 활용 등을 위해서는 3천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수시의회 특위에서는 기본계획안이 '놀이공원' 수준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별도의 랜드마크 건설 요구도 거센 상황이며 별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민자 유치도 시급한 현안이다. ◇특위 역할=국회 특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과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전남도지사 등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우선 특위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계획안이다.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엑스포 이후 여수와 인근 지역을 해양산업 등의 전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여수 엑스포 운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의 정방위적인 정부 압박도 필요하다. 성공적인 여수 엑스포를 위해서는 SOC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위 위원과 공조, 정부 지원 이끌어 낼 터"

■ 강봉균 박람회 특위 위원장

"무엇보다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이번 예산 국회에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 정부의 지

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 모델을 제시, 기타 국내 다른 지역 해안과 연안 도시들의 개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엑스포 기본계획안과 관련, 강 위원장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27일 개최되는 특위에서 전문가와 특위 위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론을 적극 반영, 최선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국회, 전남도, 여수시 등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된다"며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지역의 가교 역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조이 여행사 234-3222

제주도 3박 4일 (36H) 59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59,000	제주도 3박 4일 (36H) 74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09,000
제주도 3박 4일 (36H) 59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59,000	제주도 3박 4일 (36H) 74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09,000
제주도 3박 4일 (36H) 59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59,000	제주도 3박 4일 (36H) 74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09,000
제주도 3박 4일 (36H) 59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59,000	제주도 3박 4일 (36H) 74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09,000

제주도 3박 4일 (36H) 59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59,000
제주도 3박 4일 (36H) 749,000
제주도 3박 4일 (45H) 709,000